



광남일보는 18일 본사 1층 MVG라운지에서 '2025년 제4차 광남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속 미래 전략 모색해야”

광남일보는 18일 본사 1층 MVG라운지에서 '2025년 제4차 독자권익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박준호 독자권익위원장(광주전남언론포럼 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견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 김준수 광주교통공사 경영본부장, 신연범 광주신용보증재단 감사실장, 김문순 전 광주제능시낭송협회장, 조승유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장, 문종민 광주시체육회 부회장, 이지안 잇다커뮤니케이션 대표, 최충명 허그맘 허그인 광주무등심리상담센터 원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초광역 협력 △국가철도망·산업 기반 확충 △지역경제와 균형발전 전략 △교육·정치·문화 분야의 현안 △지역 언론의 역할과 디지털 전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과제를 짚었다.

.....

△박준호=광주시와 5개구, 전남도, 22개 시·군이 각기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서 지역 소비 촉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취지는 분명하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민의 소비를 얼마나 견인하고 있는지,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군·구 단위 지방정부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그럼에도 '너도 나도 지역화폐' 발행 경쟁처럼 보이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지역화폐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소비 패턴 변화·소상공인 매출 증가·지역경제 순환 효과 등 구체적인 지표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만약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해당 예산을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지원 등 보다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돌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견철=2000년대를 전후한 세계적인 광역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0년 이후 광역지자체 단위 행정구역과 경제통합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세종시 통합 움직임에 이어 최근에는 호남권도 가세했다. 지난해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가 지역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경제·산업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선언에 이어, 올해에는 광주와 전남이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 초광역발전을 위해 2개 지자체가 광역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치단체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을 정부의 '5극 3축' 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오랜만에 광주·전남 경제통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를 무색케 하듯 '국가AI컴퓨팅센터' 입지를 두고 시·도 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가 조성되고 있어 걱정이다. 결론은 지금은 시·도가 특정 시설 입지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 광역적 목표로 설정한 'RE100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RE100·재생에너지 R&D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방안에 공동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동맹이나 특별광역연합의 합의사업인 광주 AI·모빌리티와 전남 에너지·RE100을 위한 광역 협력체계를 급히 갖춰 추진해야만 시·도의 공동 목표인 'RE100 메가시티' 조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신연범=광남일보가 최근 지면을 증면하며 기존 16면에서 20면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경제면을 5면으로 넓히면서 지역 산업과 기업 소식을 더욱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 독자 입장에서 경제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창구가 넓어진 셈이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면수 증가를 넘어, 지역신문이 독자의 수요에 맞춰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보인다. 지역 경제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산업 이슈와 정책 동향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경제면 확대는 의미가 크다. 광남일보가 이번 변화를 계기로 더욱 실험적이고 진취적인 보도 방식에 나서길 기대한다. 지역 언론이 지



지면 증면...경제면 확대·지역 현안 강화 등 불거리 풍성
수능 결과·인재 유출 문제 등 지역 교육 체계 점검 필요
디지털 전환·시민 참여 강화로 지역 언론 역할 확대를

난 공적 역할을 살리면서도 새로운 시각과 기획으로 독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신문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김준수=정론직필의 자세로 광주 곳곳을 누비며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하고,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통찰력 있게 조명해 독자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고 있는 광남일보에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한다. 최근 빛그린국가산단에서 열린 '국가철도 광주 신산업선 건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광주연구개발특구에서 시작된 송정, 평동, 영광까지 이어지는 44.7km의 국가철도망 구축은 향후 광주와 전남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교통 사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도심과 산업단지를 촘촘하게 잇는 '신산업선'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광주의 산업단지 90% 이상이 밀집된 서북, 서광산 지역을 관통하며 교통 접근성 제고와 물류 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와 여객 수송의 발달은 그 자체로 지역사회에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지역 발전을 극대화해 민·관·경·학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호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광주 신산업선 구축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하고 세세한 정보들을 취재해 지역민들에게 제공해주면 좋겠다.

△이지안=광남일보가 지역 대표 언론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차별화된 지역 콘텐츠 강화가 시급하다. 현재 지역신문 전반이 겪는 독자 감소를 극복하려면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략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더 이상 지면에만 집중해서는 젊은 독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광남일보 홈페이지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기사 접근성 및 가독성을 높이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화일 가입 후 시민기자 등급을 부여해 누구나 지역 소식이나 생활 정보, 사건 이야기를 기사 형태로 올릴 수 있게 한다면 참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시민기자 시스템을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트래픽을 올릴 수 있고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 중심의 멀티미디어 강화가 필요하다. 유튜브는 10대부터 70대까지 세대 간 격차 없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지역 언론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독자를 확보하기 가장 유리한 채널이다. 짧은 쇼츠 형태의 지역 이슈 브리핑, 30초 생활 정보, 지역 인물 인터뷰, 행사 현장 스케치 등을 정기적으로 올리면 젊은 층 유입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토포 뉴스나 다큐 형식의 콘텐츠를 함께 운영하면 '지역 아카이브'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광남일보의 핵심 경쟁력은 지역성에 있다. 시민 참여 플랫폼 구축과 유튜브 중심의 디지털 강화는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분야로 이 두 가지가 결합할 때 광남일보는 지역사회와 가장 가까운 생활형 언론으로 제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문종민=교사의 정치참여는 오래전부터 논쟁의 중심에 서왔다. 교사는 교육의 주체이자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가진 개인이지만, 동시에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 존재이기도 하다. 이중적 위치 때문에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우려가 늘 함께 제기된다. 우선 교사는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교육정책은 교사의 근무 환경과 학생들의 학습 여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 표명은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무관심이 오히려 교육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정치참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교사는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정치적 입장을 드러낼 경우 교육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학교가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공간으로 비칠 경우 학부모·학생 간 갈등이 커지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흔들릴 수 있다. 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공적·사적 영역을 명확히 분리해 학교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개인의 시간과 공간에서는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성과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스스로 발언의 영향력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치참여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 결국 교사의 정치참여는 배제나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교육자의 중립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제다.

△김문순=요즘 지역 곳곳에서 주말·주중을 가리지 않고 축제,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풍부한 문화 콘텐츠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활력을 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분명한 도움이 된다. 적절한 규모의 행사는 지역민의 정서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 등 정신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그러나 양에 치우친 과잉의 행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특정 시기에 유사한 행사들이 한꺼번에 몰리면 관객이 분산돼 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각 기관이나 단체가 비슷한 주제·형식으로 행사를 반복할 경우 시민들의 흥미 역시 급세 식어버리기 쉽다. 예술가나 단체가 여러 무대를 동시에 소화하다 보면 과로는 물론 창작 활동의 질 저하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문화예술행사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형식적인 행사 진행보다는 기획의 깊이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어 시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대에 오르는 예술가뿐 아니라 연출자, 기획자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시민에게 오래 기억되는 품격 있는 행사를 만드는 데 행정과 지역 문화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최재훈=최근 국제청·경찰청 등 핵심 기관 고위직에 호남 출신 인사가 중용되고, 국가 AI 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전남 해남 솔라시도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호남이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위직 인선은 능력 기반 인재 등용과 함께 지역 인재의 잠재력을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적 변화다. 특히 2조5000억원 규모의 AI 컴퓨팅센터는 호남이 미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지역은 산업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 초광역 협력 등을 통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야 하며, 언론은 이러한 흐름을 국가 균형발전의 사례로 조명해야 한다. 이제 호남은 '소의 만화기'가 아니라 미래 성장과 균형발전의 주역으로 기대받는 시점이다.

△조승유=최근 사람들의 관심사는 내년 지방선거다. 주변에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가 전문가 수준으로 오가고 있다. 신문을 볼때 지역 정치와 자치 분야에 관심이 많아 관련 면을 자주 살펴보는데, 광남일보 정치·자치면은 비교적 탄탄하게 구성돼 있어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는 더 과감한 지적과 균형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권과 후보가 중심이 되면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어렵다. 시장부대 기초의원까지, 그들의 역량과 선택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와 의원들의 활동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잘한 점은 인정하되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문제를 발견하면 제기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며, 시간이 지나면 평가할 수 있는 언론, 그것이 지역 언론의 역할이다. 광남일보가 그런 역할을 수행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돼 주길 바란다.

△최충명=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금, 광주·전남지역의 수능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기획 보도가 필요하다. 최근 광주에서는 지역을 떠나는 젊은 인재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번 수능과 지역교육·지역경제의 현주소를 함께 짚어보는 것이 시의성이 크다. 올해 수능 난이도 변화가 지역 학생들의 성적과 대입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광주·전남 각 고교의 수능 대비 지도 체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돼 왔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의 체감의 견과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 학생들이 겪는 교육적 여건의 검증과 한계를 함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정래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